

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전번호 제2022-005-029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2. 3. 23.

#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# 이 유

##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이하 “보호법”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 일반현황 >

사업자등록번호	대 표	자본금	매출액(20년)	주요서비스	종업원 수

## II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.6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1. 개인정보 유출 경위

#### 가. 유출 경로 및 규모

피심인은 사내 이메일로 직원 교육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      건을 유출하였다.

#### 나. 경과 및 대응

- '21.5.27. 이메일 수신 직원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여 첨부 파일이 잘못 전송된 사실을 알고 이메일 회수 조치
- '21.5.31. 본사 IT팀에 수신자 메일함에서 이 사건 이메일 일괄 삭제 요청
- '21.6.1. 전체 임직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·삭제 요청(이메일·문자)
- '21.6.1. 개인정보보호 포털로 개인정보 유출신고
- '21.6.4. IT팀에서 관련 이메일을 모두 강제 삭제하였음을 확인

### 2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#### 가.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

피심인은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.

#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.12.28. '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라는 의견을 2022.1.13.에 제출하였다.

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

##### 가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“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# 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「과태료의 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.

##### 가. 기준금액

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.

##### < 과태료 부과기준 2. 개별기준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카.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3	600	1,200	2,400
계		600		

## 나. 과태료의 가중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[별표2] 과태료 부과기준 1. 일반기준 라.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# 다. 과태료의 감경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며 추가 피해가 없고, 법 위반상태를 모두 시정하였으며,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,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의 50%인 300만원을 감경한다.

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50%를 감경한 300만원을 부과한다.

### 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조항	위반내용	과태료 금액 (단위 : 만원)			
		기준금액 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(D) =(A+B+C)
법 §24의2②	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	600	-	△300	300

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4호의3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2022년 3월 23일

위 원 장 윤 종 인 (서 명)

부위원장 최 영 진 (서 명)

위 원 강 정 화 (서 명)

위 원 고 성 학 (서 명)

위 원 백 대 용 (서 명)

위 원 서 종 식 (서 명)

위 원 염 흥 열 (서 명)

위 원 지 성 우 (서 명)